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권혁열 도의장 강릉 백일교 점검	1
강원도민일보	13면	김화묵 강릉문화원장 취임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1
江原日報	12면	강릉문화원 김화묵 신임 원장 취임	2
江原日報	12면	강릉문화원 부지·건물 확보 시급	3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플라즈마? 방문	4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경제산업위 철원 플라즈마산업연구원 방문	4
세계타임즈	온라인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지역 인프라 활용 산업 현장 ...	5
江原日報	03면	김길수 자치도 지원특별위원장 사임	6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박호균 (강릉)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최종수 (평창)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강정호 (속초)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01면	3대 '킬러규제' 혁파 강원 산단개발 기대	8
강원도민일보	01면	오염수 방류 첫날 수산물 방사능검사 '적합'	9
강원도민일보	04면	신 교육감 "교육받을 권리 보장·공교육 책무 다하길"	10
江原日報	06면	1조1천억 '자율주행 실증도시' 강릉시 관심	10
江原日報	11면	소초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11
江原日報	10면	'행사 기간 WT본부 유치 확정' 최대 성과	12
강원도민일보	04면	피해복구 아직인데…영동 가을태풍·폭우 우려 초긴장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성장동력 예산 더 확보하도록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중소기업 금융 위기 대책 서둘러야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반도체 클러스터' 국비 확보, 사업 동력 삼아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4일 만에 번복된 한심한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	16

江原日報
2023년 08월 25일 (금)
인물 21면

권혁열 도의장 강릉 백일교 점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4일 강릉시 연곡면 백일교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했다. 백일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3개 항목에 E등급으로 통행이 금지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지역 13면

김화묵 강릉문화원장 취임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최돈설 원장 이임 "문화발전 기대"

문화원 청사·주차장 증축 등 추진

8년간 강릉문화원을 이끌었던 최돈설 원장(14·15대)이 이임하고, 김화묵 원장(16대)이 새롭게 취임했다.

강릉문화원장은 24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박주선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 심재빈 강릉시 노인회장, 정호돈·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기관사회단체장, 도 18개 시·군문화원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강릉문화원장 이·취임식이 24일 문화원 공연실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임한 최 원장은 "문화원과 함께한 8년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여러 지역사회단체장과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문화재 야행, 강릉한복문화창작소 등 크고 작은 일을 개최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온 강릉문화원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김화묵 신임 원장은 "문화원이 지난 1954년 출범하면서 그 동안 10명의 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큰 발전을 이뤄 놓았는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화재 야행을 비롯한 명주인형극제 등 대규모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회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소한 문화원 청사와 주차장을 증축하는 등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오래도록 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한 최 원장과 관록의 3선 시의원을 지내며 소통, 공감능력이 뛰어난 신임 김 원장 두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문화예술의 고장 강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은 "문화예향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하는 강릉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릉문화원이 전국 으뜸 문화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배

江原日報 2023년 08월 25일 (금)
지역 12면

◇강릉문화원장 이·취임식이 24일 강릉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려 최돈설 전 원장이 이임하고 김화묵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강릉=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강릉문화원 김화묵 신임 원장 취임

강릉문화원장 이·취임식이 24일 강릉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려 최돈설 전 원장이 이임하고 김화묵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박주선 도문화원연합회장 등 기관·단체장 및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임영문화예술학교 오카리나반 공연으로 시작해 최돈설 이임 원장의 약력 소개, 이임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김화묵 취임 원장 약력 소개, 취임사, 축사와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4·15대 원장을 역임한 최돈설 전 원장은 "1966년 공무원에 합격한 이후 56년 동안 강릉을 위해 일하다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지만, 강릉 발전에 큰 기회가 될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모두가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6대 원장으로 최종 선임된 김화묵 원장은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번영회장, 가톨릭관동대 총동창회장, 강릉문화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릉=최영재기자

2023년 08월 25일 (금)
지역 12면
江原日報

강릉문화원 부지·건물 확보 시급

도서 1만권 보관 장소 없어 컨테이너 임시 보관

주차·문화공간도 부족… 신임 원장 "임기내 확대"

【강릉】문화도시 강릉을 상징하는 기관인 강릉문화원의 부지 및 건물 확보가 시급하다.

강릉문화원은 2000년 강릉시 교1동 현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많게는 하루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전체 부지가 3,251㎡에 불과해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 면적은 20면밖에 되지 않고 문화 공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1만여권에 달하는 문화 관련 도서를 보관할 곳이 없어 주차장 내 별도 컨테이너 박스에 임시 보관하는 실정이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문화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인 교동택지·유천택지와 인접해 방문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위상에 걸맞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 부지 내 증축 및 주차장 확대 또는 신축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개최된 강릉문화원장 이·취임식에서도 좁은 주차장과 강의실 문제가 우선적으로 거론됐다. 김화묵 제16대 문화원장은 강릉시민의 문화원의 공간 확보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등 참석한 기관장들도 문화원을 확대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화묵 문화원장은 "인근 주택단지에 문화 시설이 없다 보니 강릉문화원을 찾는 시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곳이 지역의 거점 문화 향유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임기 내 문화원 확대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영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8월 25일 (금)
인물 21면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플라즈마硏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24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찾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인물 20면

도의회 경제산업위 철원 플라즈마산업연구원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24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식물병리연구실 등 주요시설을 살폈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년 08월 24일 (목)
지역

세계타임즈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지역 인프라 활용 산업 현장 살펴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8월 24일(목)부터 8월 25일(금)까지 이틀간 철원군 일원에서 의정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8월 24일(목)에는 철원 지역 대표 연구기관인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연구원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식물병리 연구실, 파일롯동 등 연구원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현장 직원들과 연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8월 25일(금)에는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퀀텀닷 LED조명 실증사업 현장인, 철원샘통고추냉이(주)를 방문하였다. 작물에 최적화된 보광형 퀀텀닷조명 설비를 구축하여 고추냉이 생육기간을 단축하고, 방문객 체험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등 스마트 농업 및 6차산업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금번 현지시찰에서 경제산업위원들은 6차산업은 농촌지역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융복합 산업이자 창조산업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 마련을 비롯한 정책적 역량을 모으는 데 동의하였다.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현재 경제의 패러다임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요구되는 고기능, 다기능, 소형 소재 특성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노소재 융복합화, 양자점 등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강원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혁신 허브 기관 및 신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도내 산업이 한 단계 재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코리아, 시사일보 등 40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8월 25일 (금)
종합 03면

김길수 자치도 지원특별위원장 사임

신임 위원장 내달 임시회서 결정

김길수(국민의힘·영월·**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최근 특위 위원장을 사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 전 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도의회에 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 처리됐다. 김 전 특위 위원장은 강원자치도의 안착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지난해 9월부터 특위를 이끌어 왔다. 해당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정파를 초월한 협력으로 평가받았다. 특위는 강원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출범 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김길수 전 특위 위원장은 "강원자치도 성공적 출범까지를 제 역할로 봤다"며 "9월 회기가 시작하기 전 역량이 뛰어난 다른 의원들께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위원장 공석이 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그는 상임위원장직을 고려한 판단이지 않겠냐는 시각에 대해선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신임 특위 위원장은 다음 달 임시회 기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창수 전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아직 기획행정위원장 추대를 위한 의견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며 "조만간 조율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인물동정 13면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5일 오후 7시 30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강원특자도립무용단 제9회 정기공연 '무의무아'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인물동정 16면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6일 오전 9시 평창 더위사냥축제장에서 열리는 제52회 대화면민체육대회 및 화합큰잔치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인물동정 18면

는 2023년 속초시농업인단체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한다.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5일 오전10시 NH농협 설악수련원에서 열리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종합 01면

3대 '킬러규제' 혁파 강원 산단개발 기대

윤 대통령 규제 신속제거 지시
지방정부 주도 산단 전환 주목
강원 총 66개 산업단지 운영
도, 지역별 '브랜드 산단'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3개 분야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내 산단의 맞춤형 활용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는 방향도 제시, 도내 산단 재정비 작업과 함께 3차 개정에 착수한 강원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각 분야와 연계된 특례안 발굴이 맞물리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킬러 규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했다.

회의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3가지다. 이 중, 1호 킬러 규제로 산단 규제 입지 규제를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해 노후산단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총 66개(국가산단 1·일반산단 17·도시첨단산단 4·농공단지 44)다. 이 가운데 노후산단은 4곳이다. 춘천 후평산단 1곳, 원주 문막과 우산 산단 등 2곳, 강릉 입암동 일반산단 1곳이다. 현재 춘천 후평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고, 문막은 완료된 상태다.

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서 언급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전환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 확대(18→31개)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산단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것과 맞물려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혁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계획안의 세부방향성이 제시되면 준비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종합 01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한 24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수산물 시료 채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시료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섭취할 수 있는 부위로 1kg(작은 사진)을 뜬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됐다.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에서 매일 수산물 시료를 채취한 뒤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오염수 방류 첫날 수산물 방사능검사 '적합'

강원도 방사능 관리체계 강화
김 지사 "모든 과정 투명하게
과도한 불안감 도민에 피해만"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도는 도민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산물(생산단계)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품종인 방어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24일부터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매일 시행하는 등 방사능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검사항목은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이다.

이날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했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반 만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해에서 매일 시료를 채취해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발표하겠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즉각 국민에게 알리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도민에게 돌아올 뿐이다. 도정(道政)을 믿고 맡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재훈·김덕형 ▶관련기사 3·5·8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종합 04면

신 교육감 "교육받을 권리 보장·공교육 책무 다하길"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호소문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 근무하던 중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초등교사를 기리고자 오는 9월 4일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부탁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24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으나 아직 선생님들의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에 나가 눈물 흘리는 마음도 공감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에도 수업을 이어 간 선생님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하겠느냐"면서 "하지만 교권은 교육의 멈춤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실을 떠나지 않는 의연함 속에서 지켜진다. 교실만이 배움의 희망이고 학교만이 교육의 중심인 강원도에서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다 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민엽

江原日報
2023년 08월 25일 (금)
종합 06면

1조1천억 '자율주행 실증도시' 강릉시 관심

정부 공모사업 진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경쟁력
시 "28일 설명회 후 전략 수립"
횡성군도 사업 추진 의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4대 정부부처가 참여해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벌이는 정부 공모에 강릉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6년 ITS(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개최를 앞둔 강릉은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와의 경쟁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Living Lab) 도시 선정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이 1개 도시 전역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연구개발한 자율주행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을 통합 실험한다.

도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지역으로 조성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2027년까지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의 선점은 물론 상징적인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8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리빙랩 공모사업 설명회'를 연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강릉시와 횡성군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강릉은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로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이번 공모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공모 기준이 일부 대도시 위주로 설계된 점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28일 설명회에 참석해 유불리를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강릉시는 다양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횡성군도 미래차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공모는 시·군이 직접 추진하지만 도에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참여 의지는 있지만 공모제안서 일부가 대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설명회에 참석해 질의도 한 후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선정 공모는 다음 달 25일까지로 제안도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올 10월께 최종 후보도시가 선정된다. 최기영기자

2023년 08월 25일 (금)
江原日報
지역 11면

소초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원주시 주민설명회 개최
원강수 시장 "환경개선 노력"

◇원주시는 24일 소초면주민자치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소초면 축사 악취 해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원주】속보=원주 소초면 축사에서의 악취가 심각한 상황(본보 지난 24일자 11면 보도)에서 원주시가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24일 소초면주민자치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내년까지 소초면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올해 초 출범한 강원도 환경관리실무협의회와 함께 소초면 일원의 악취 문제를 민선 8기 선결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발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악취 해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주에게 명령을 통한 개선과 미이행 과태료만 부과했다. 도내에는 2008년 4월 유일하게 영월 한반도면 쌍용리 비료생산시설이 지정됐다.

이날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현장조사 중간 결과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향후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조사 결과 축사 3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기준치보다 심한 '부적합' 판정으로 확인됐다. 설명회장을 찾은 주민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집에 악취가 심각해 손자들이 놀러오지 않을 정도"라며 "저녁에는 돈사 주위가 마치 폭탄이 터진 후 생기는 버섯구름처럼 먼지로 뿌옇다"고 토로했다.

원강수 시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환경·축산 관련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초면에는 1990년대부터 3곳의 돈사에서 총 2만1,0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특히 1곳은 퇴비제조공장까지 운영돼 2㎞ 반경 주민들은 수십년째 악취와 해충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김인규기자

江原日報

2023년 08월 25일 (금)
지역 10면

/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성료 /

‘행사 기간 WT본부 유치 확정’ 최대 성과

폐막식 관계자 100명 참석
유공자 감사·공로패 전달
세계대회 4종 첫 동시개최
폭염 고려 내년 일정 조정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24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폐막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폐막식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 이상민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및 관계자와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24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관련기사 20·23면

'Your Taekwondo with Chuncheon'을 구호로 지난 18일 개막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63개국 5,70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관람객 1만 3,000여명을 불러 모았다.

24일 특설경기장에서 개최된 폐막식은 축제 관계자와 경기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축제 성공을 위해 힘쓴 유관기관과 봉사자 등에게는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올해 축제 개최의 최대 성과는 단연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가 꼽힌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WT 본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4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번 축제 기간에 맞춰 WT집행위원회 승인과 이전 협약을 마무리하며 WT 본부를 품었다.

세계태권도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G4)과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G4), 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 등 WT 승인 대회 3종이 이번 축제를 계기로 신설됐다. 또한 올해 축제는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G2)까지 세계 대회 4종이 동시 개최된 첫 사례로 남았다.

주요 경기가 열리는 기간 지속됐던 폭염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는 내년 축제 개최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에어돔 설치가 마무리되면 경기장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이상민 축제 조직위원장은 “짧은 준비 시간과 폭염 등의 악조건에도 사고 없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축제가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을 더욱 발전시킬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총평했다.

육동한 시장은 “축제 기간 중 WT 본부 유치가 확정돼 태권도로 춘천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축제를 위한 인프라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종합 04면

피해복구 아직인데…영동 가을태풍·폭우 우려 초긴장

수해 공공시설 48곳 복구 미완
도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지자체, 현장점검 등 대비 만전

태풍 카눈이 강원도를 강타한 이후 복구작업과 조사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영동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가을 태풍이 북상할 우려까지 나오면서 태풍 피해 주민들과 지자체가 긴장하고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공공시설 359건 중 311건(86.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쳐 아직 48곳의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끝내지 못했다.

이 처럼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응급 복구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을 태풍의 가능성과 영동을 중심으로 100㎜ 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지난 22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강원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각 지자체는 비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은 24일 집중호우에 따라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 재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고성은 아직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고성군과 소방당국은 지난 제6호 태풍 '카눈'의 피해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더욱 열악해진 상습 침수지역 및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을 다니며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살폈다.

주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주민 A씨는 “지난번 400㎜ 물폭탄으로 마을 뒤 산에서 토사가 흘려 내려 임시 방편으로 군에서 방수포 작업을 완료했지만 또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온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가을 태풍도 문제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제 9호 태풍 '사올라'로 예상되는 열대저압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릉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응급복구가 마무리됐음에도 해안가 저지대 등 침수지역의 안전 예방에 나섰다. 또 찾아올 수 있는 가을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폭우 피해를 입었던 경포진안 상가의 박 모씨는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져 상가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비가 계속 내려 걱정”이라며 “강력한 가을 태풍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상가주변과 저지대 물빠짐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조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긴 장마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폭우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홍성배·지산·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사설/칼럼 19면

성장동력 예산 더 확보하도록

-세수 대폭 감소 내년 정부예산 긴축 기조 뚫어야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국비 반영 여부 점검에 분주합니다. 내년 목표액을 9조 5000억원으로 정한 도는 주요 현안 사업비는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강릉~제진, 춘천~속초 등 3개 구간 철도 개설 등 교통망 구축 사업비가 확보됐고,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공급시스템 구축 76억원과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60억원 등 여러 첨단산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은 지키는 동시에 산업 성장동력 예산에 중점을 두고 추가 반영하는 마지막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연례·반복적인 법정 업무와 관련된 예산 7조 360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주요 현안 사업 신청액은 2조원대에 불과하므로 절대적인 수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조원 중엔 철도와 국도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비용이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력산업 동력 예산으로 불릴만한 액수는 1조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작고 첨단산업 기반이 허약해 관광산업에 기대고 있는 강원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순수한 산업성장 관련 예산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져야 합니다.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기반 구축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다년간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속도에서 앞서려면 예산이 적시에 투입돼야 합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과 같이 다양한 중앙부처의 대표사업에 강원지역이 포함돼야 합니다. 대표적인 문화도시 강릉과 쉽게 견주는 전주의 경우 내년 핵심예산으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K-한지문화마을 조성을 꼽았습니다. 강릉 영월 속초 등은 문화콘텐츠를 강화해 관광과 접목하려는 대표 도시입니다. 타시도보다 국립문화시설이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건립 당위성은 얼마든지 있기에 이들 지역에서 숙원하는 국립기관이 들어서야 합니다.

대폭적인 세수 감소로 인해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압박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예산을 사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도정은 국회 의결까지 매진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게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25일 (금)
사설/칼럼 19면

중소기업 금융 위기 대책 서둘러야

-대출금리·연체율 동반상승, 부실 위험 증가

강원지역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대출 금리와 연체율도 올라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가 도내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부동산·금융 업계의 연쇄 채무불이행 위험과 수출 둔화 등 불황을 겪어, 대중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강원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보루입니다. 금융 부담으로 경영 기반이 흔들린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지역에 전해집니다. 기업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행정과 금융당국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22조687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0%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원지역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 7.20%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지역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1년 5월 0.20%, 2022년 5월 0.18%, 2023년 5월 0.35%로 올해 들어 0.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출 잔액 대비 비율로 추산하면 2021년 340억원에서 지난해 357억원으로 소폭 오른 뒤, 올해 77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 기업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업의 금융 위험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올해 7월 말 보증 건수는 7만8416건 1조7631억원으로 사고발생률은 3.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 발생률인 1.0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대위 변제율은 0.60%에서 2.51%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위험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위기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의 대출 이자 이차 보전과 금융권의 대출 상환 유예 등이 이뤄진다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이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 악화로 확대하지 않도록, 도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25일 (금)
사설/칼럼 19면

道 '반도체 클러스터' 국비 확보, 사업 동력 삼아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45억원 등 총 95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반도체 교육센터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반도체 관련 기관 설립을 위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구축 예정인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의 경우 인텔과 케임브리지대 밀너연구소가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205억원으로 이 중 일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비 22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50억원이 소요되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또한 사업 추진의 동력이 생겼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핀테크 등 전략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더욱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너도나도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성패의 핵심 과제인 국비 확보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도민들의 꿈과 희망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 들어 정부가 경기 용인시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주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도와 원주시는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강원테크노파크도 도와 원주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에 발맞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신성장 고부가 첨단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의 주요 자산이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관련 국비 확보가 강원자치도와 원주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25일 (금)
사설/칼럼 19면

4일 만에 번복된 한심한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

신규 교사 9월1일자 단행했다가 임지 변경
올 3월1일자 인사발령에서도 '정정'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인사행정 라인 개선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행정 난맥이 그칠 줄 모른다. 도교육청이 9월1일자 신규 초등 교사 인사를 단행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뒤늦게 이를 정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 노조는 이번 인사 정정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신규 초등 교사 인사발령 임지(시·군) 지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4일 뒤 도교육청은 유선으로 발령지를 재통보했다. 처음 원주로 발령받았던 A 교사는 삼척으로 첫 근무지가 바뀌었고, 삼척으로 통보받았던 B 교사는 태백으로 임지가 변경됐다. C 교사의 경우 철원에서 고성으로 임지가 바뀌었다. 황당한 임지 변경 통보는 꿈에 부풀어 있는 새내기 초등 교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 사안은 도교육청과 신규 교원 간의 문제로 다루기에 앞서 도교육청의 한심한 인사행정 난맥 및 그에 따른 신뢰 상실에 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당시 신규 교원 인사 발표 경위를 철저히 복기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부터 짚어야 하는 것이 신규 초등 교사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다. 당장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사는 첫 임지 통보 후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 재지정으로 위약금 발생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불 보듯 하다. 교원 인사 번복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올 3월1일자 인사발령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행정편의적 인사를 실시했다가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인사행정 난맥은 근무 기강 해이의 병폐를 고루 드러낸 사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이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당장만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는 발표가 이번에 여지없이 나타났다. 즉, 해당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상황을 안내하고 사과했다는 식이다. 또 가장 원론적인 해명으로 "임지가 변경된 신규 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이 파악되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래서는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힘들다. 교원 인사행정과 교원 간의 간격을 더욱 벌려 놓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신규 초등 교사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당연히 보전해 줘야 한다. 도교육청은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도교육청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제 조건은 제대로 된 인사로 경쟁력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때다. 교육 정책의 시작인 인사가 흔들리면 도교육청이 내놓는 그 어떤 정책도 동력을 잃게 된다. 도교육청이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인사행정 라인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